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KBS가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신료를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나 인상 요인은 긴 설명이 없어 도장을 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KBS 뜻대로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는 드물다. 이 문제는 물가나 경영의 문제 리기보다 정치문제이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 그때는 아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주의 시민단체가 그야말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이를 반대했다. 그 명분은 간단 명료했다. KBS가 공영방송답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 반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KBS 수신료를 전기세 등과 아울러 내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KBS 수신료만 따로내는 분리 징수제를 추진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여야의 주장이 백발십도로 달라졌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인데 반해 KBS를

인 민주당이나 진보주의 시민단체는 불편 전의 기세로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각 정당과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시청자이고,

KBS 수신료는 올려야 하는가?

수신료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위해 내는 것인데,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 홍보를 하는 방송을 위해서라면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마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쯤에는 아당 쪽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아예 수신료 분리 징수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낼지도 모른다.

수신료 논쟁의 끝에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 여과 없이 투영되어 있다. 어느 정당이건 정권을 잡으면 KBS를

정권의 앞잡이로 만든다. 그렇게 하여 KBS가 공영성을 내팽개치고 여당 매체가 되면 아당은 사사건건 KBS의 발목을 잡는다.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정치인들은 일구이언(一言二用)을 법 먹듯이 한다. 여당이 되면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도 아당이 되면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바꾼다. 아당일 때는 극구 반대하지만 여당이 되면 절대 찬성한다. 말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단지 'KBS가 아군일 때는' 또는 '적군일 때는'이라는 전제를 생략했을 때를

길이 수신료를 올리는 길이고 KBS가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정권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장이 앞장서서 외압을 막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편파방송을 하지 말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내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KBS는 경영이 어렵다면 수신료를 올리려 하기 전에 빠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KBS는 늘고며는 고액 연봉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경영이 방만하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뒤덮어두고 경영난을 오로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厚顏無恥)한 일이다.

KBS 수신료는 이제 올릴 때가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릴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공영성 보장이 있는 한 올릴 수 없다는 논거라면 백년하청(百年河清)이다. 올려놓고 자켜보는 게 순리다. 그러나 KBS는 지금 국외자가 이 정도 이야기마저 부담 없이 퍼기가 민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리는 맡이 생각난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김민수



우리 연대는 광주시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시·도민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견의, 환경정책활동 등 환경보전감시에 계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기후 환경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환경이 곧 미래를 지배

불법 소각 현장을 보며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대는 환경보존감시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많이 봐왔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계몽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병들어버린 환경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토양·공기·물 등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후손에게 물려줄 때에는 아낌없이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불법 소각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 불법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불법 소각 및 폐기물·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등 환경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의 오염 실태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관적인 자세는 환경만 더욱 훼손시킬 뿐이다.

이는 납과 수은 그리고 청산가리의 10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다이옥신 등이 다양 포함되어있는 물질로 종

금속이 들어있는 소각재를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스스로 불법 소각을 스스럼없이 함으로써 다이옥신이 생성되고 이는 곧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 준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하며 물에 녹지 않는다. 고 엷이나 제초제의 불순물로 존재하고 소각 과정에서도 생성된다.

특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폐암·간암·임파선암 등을 유발하며 신생아를 낳을 때 기형 발육장애 등 생식계 장

기고

김창석



장흥댐의 풍족한 수자원과 탐진강 수변의 친환경적이고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장흥군이 시도한 물 축제는 물의 가치를 다시 새기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다. 축제에서는 물과 숲과 음식을 테마로 한 각종 체험과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그 중 백미는 뗏목 타기 경주다. 모처럼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뗏사공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는 장흥군의 브랜드를 살려 기

정남진 물축제 맘껏 즐기세요

명의 근원

이제 물 산업은 첨단기술 녹색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육성되고 있다.

물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안목도 뛰어났다. 상수도 시설이 생기기 전의 주된 식수원은 우물이었다. 태종은 서울

로 재천도한 직후 다섯 짐마다 하나씩 우물을 파도록 하여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만 무려 3000개 이상의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온다.

요즘도 물 문제는 시대의 과제다.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기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두 개의 노벨상(평화상·과학상)을 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정도다.

간 중 문화관광 기행특구와 생약초 한방특구, 토요시장의 고장, 한우특구답게 전국 문학인 대회와 생약대전을 펼쳐진다. 편백 숲이 울창한 우드랜드, 슬로우시티 등 건강 미학의 웰빙현장도 선보인다. 거리무대에선 세미나드 활용 대회, 병아리 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장흥지역은 최근 노력함에서 제주도 성산포까지 2시간대의 뱃길이 뚫렸다. 무산김과 키조개, 갯장어, 낙지, 표고버섯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멋스런 곳에서 인간이 물에 대한 경외심을 지피고 물의 가치를 향유하는 축제의 미망에 특히, 도시 가족들의 단란한 나들이를 권유 드린다. 장흥군민들은 지금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얼마 전 동생이 군 입대 전 용돈을 번다며 3개월 동안 일하기로 업주와 약속하고 서울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하게 돼서 간호를 위해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한달치 임금 65만원 중에 중도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전부 주지 않았다고 했다.

주변에도 시간 외 근무, 시급에서 밤값 문제, 최저임금 위반, 언어폭행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항도 못해보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학생

들에게 이런 경험이 적은 학생들 위주로 아르바이트의 기본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조건 녹음, 급여에 식ade 포함 여부 명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 같은 걸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 스스로도 얕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경우 상세한 내역을 품질히 기록해 놓다가 이런 일에 능숙한 선배, 또는 노무사 등의 힘을 빌려 악덕 업주들에게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유한권·광주시 동구 대인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존 공공기관 회장실 남녀비율 개선됐으면

얼마 전 남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늘 경험하는 일이라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대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영화관의 무관심에 이번에도 상당히 불쾌하고 헛된 경험을 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한꺼번에 회장실로 모여든 여성 관객이 회장실 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회장실 앞이니 그 모양새가 좋을 리 없고, 또 무려 두시간이 넘도록 좁은 좌석에서 꼽짝달싹 못한 채 긴장된 상태로 참고 있다가 일시에 그 긴장이 풀린 채 일어섰으나 오죽 할까.

다 아는 일지만 남성들은 그냥 서서 쉽게 용변을 해결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

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세 배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의 회장실 크기와 수차는 여전히 남녀 동수인 차 그대로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예전에 이 같은 차별대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를 했더니 남성의 평균 회장실 이용시간은 35초인데 비해 여성은 90초로 나왔다고 한다.

법적으로 암으로 증축되는 건물은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짓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대부분의 공공장소(놀이공원, 영화관 휴게소 등)는 정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모르겠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시설

'약자 배려'는 지자체 의무이자 책임이다

전남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2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1년도 못돼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한다.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지자체 재정 형편상 힘이 부친다는 게 그 이유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을 마치 생색내기 수단쯤으로 여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부하는 지자체의 의식수준이 한심스럽다.

전남도의 2010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선 시·군이 교통 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본 예산에 책정됐던 18억7500만(25대) 원 가운데 12억900만 원을 삭감했다. 당초 예산보다 64.5%가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이 저상버스 구입비가 대폭 감원된 것은 해당 지자체가 과다한 운영·관리비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경우 애초 20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추경에 달랑 2대만 신청

성범죄 예방 학부모 관심 우선돼야

여름방학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의 신체적 노출이 많고 행동이 자유로워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여름철에 주로 대낮 시간대, 학교 주변 공터나 놀이터, 주택과 골목길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역할이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급적 부모와 동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원을 오고 놀이터에서 놀 때도 여성이 함께 놀도록 하는 등 여여가지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이 역시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성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생물학적 거세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끝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범죄를 밭벌색원하겠다는 의지도 현실 앞에 사실상 곁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역할과 경찰의 노력, 정부의 의지 등 삼위일체를 통해 재발 방지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처럼 아동 성범죄 분석 자료를 만든 것은 범죄 예방에 대한 나름의 의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린이 활동이 자유로운 방학인데다 가해자 역시 면식별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방범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역할이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급적 부모와 동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원을 오고 놀이터에서 놀 때도 여성이 함께 놀도록 하는 등 여여가지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이 역시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성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생물학적 거세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끝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범죄를 밭벌색원하겠다는 의지도 현실 앞에 사실상 곁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역할과 경찰의 노력, 정부의 의지 등 삼위일체를 통해 재발 방지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無等鼓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폭염 못지않게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은 일파만파였다.

강 의원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 참가한 남녀 대학생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보도된 이후 아당에서는 그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사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아나운서를 향해 하는 여대생을 둘러싸고 전진성 회장이 시내 내용에는 대통령까지 거론돼 그 과정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나중에 대학생들끼리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세는 강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이 이를 조사해온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으로서 사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으로서 사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강 의원이나, 강 의원에게 양보